

# 尹, 2차 개각...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지명

### 신, 국방정책 전문가·유, MB맨·김, 박근혜 정부 靑대변인 “전문성 고려 업무 연속성 유지하고 관료 조직 긴장감 유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육사 출신으로 군에서 중장으로 예편한 신 후보자는 국방정책 기획·전략 전문가로 통하며,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개각을 통해 전문성을 고려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료 조직에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신원식 후보자는 국방 정책과 전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방정책 기획·전략통으로 평가된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7기로 군에 입문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보다 3기수 선배이고, 김용현 경호처장보다 1기수 선배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대령), 육군 제3보병사단장(소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육군 수도방

위사령관(중장)과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중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중장으로 예편했다.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그는 국회 입성 후 전문성을 발휘해 당 ‘전안함 장병 및 유족 지원 TF’ 위원장 등을 맡았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여당 내에서 외교·안보·국방 분야 이슈를 주도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미 때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지낸 예술인 출신 문화정책 전문가이다.

MB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08~2011년 약 3년간 재직했으며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 예술의전당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연극 무대로 복귀한 후보자는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에 임명됐다.

유 후보자는 1951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중앙대에서 연극영화학과 학사·연극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1년 연극 ‘오셀로’로 데뷔한 그는 1973년 MBC 공채 탤런트 6기에 뽑히며 본격적인 배우 생활을 했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인수위원회 위원, 2004년 초대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았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인수위 출범 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개각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행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초대 대변인을 지내며 정부 감각을 쌓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한국사회개발연구소 조사부장, 중앙일보 여론조사팀장, 디오피콘사이버티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여론조사 분야 전문가로도 꼽힌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정몽준 전 의원이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통합21’을 창당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대위 대변인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 들었다.

이후 종합편성채널의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보수 논객’으로 활동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윤창중 전 대변인과 함께 초대 청와

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윤 전 대변인이 2013년 5월 박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성추행 논란’으로 경질된 이후 같은 해 말까지 홀로 대변인직을 수행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구에 도전했지만, 새누리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정부 “일본 수산물 수출 확대 제안 받은바 없다”

### “수입 금지 조치 예외 없이 적용”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일본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데 이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변함 없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일본무역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박 차관은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수입 수산물이 우리 바다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지난달 28일부터 실시 중인 ‘제2차 민관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과 관련해 현재까지 9384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7개소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원산지 미표시가 37개소, 거짓표시가 10개소다. ‘일본산’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는 7개소,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3개소였다. /연합뉴스

박 차관은 “지자체가 최근 개별적으로 위반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2차 특별점검 결과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형태로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일본 오염수와 관련해 답변한 내용을 언급했다.

박 차장은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회원국 참여가 허용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제기구로서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개별 회원국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은 아울러 그로시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IAEA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립하기로 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IKFIM)에 대해 “향후 IAEA 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한국도 전문가가 후쿠시마 IAEA 사무소에 상주하는 방향으로 먼저 협의했지만, IAEA가 (기자회견 답변과) 비슷한 고충이 있어 ‘상주는 안 되지만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제안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교권 4법’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태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교육위 소위에서 교권 4법을 논의했으나, 이들 쟁점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육청에 아동학대사태판단위원회를 설치해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활동인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은 여당이 반대했다.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학대사태판단위원회 관련 선생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없었고, 반대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한다”며 “생활기록부 등록도 선생님들 간 입장 차이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윤상현 “코인 전수조사에 가족 포함하자...與 솔선수범해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대상에 배우자 등 의원 가족 재산도 포함해야 하며,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여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일 중요한 이해 충돌 위반 여부를 살피려면 차명거래나 미공개 정보를 조사해야 하는데 가족의 코인 보유를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의힘만이라도 가족까지 포함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보유 현황 조사를 진행한다. 의원 298명이 개인정보 동의를 제출해 사실상 전원이 조사에 동의했다. /연합뉴스